

# 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 성 휘 \*

## 1. 서론

유럽연합 농식품 분야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다.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①소득지원과 시장조치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와 ②회원국의 필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연합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농업정책 개혁(CAP reform)을 시행해 왔으며 가장 최근 개혁은 2014년에 실행했다.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29일에 발표한 “농업의 미래: 유연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공동농업정책”에서 공동농업정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농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은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sup>1)</sup> 15세 이상의 28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28,0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7년 12월 2일부터 11일까지였다. 직접방문을 통한 면대면 방식(face-to-face)으로 응답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 농업·농촌의 중요성
- 농업인의 역할

\* 미래정책연구실 초청연구원 (fullymotivated@krei.re.kr).

본고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18년 2월에 발간한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 비슷한 조사는 2007년부터 2년 단위로 계속 시행되어 왔으며, 이번 조사는 6번째였음.

- 주요사안별 정책결정의 주체(유럽연합, 국가, 지자체)
-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
- 공동농업정책의 인지도, 성과, 우선순위
- 공동농업정책의 수혜자
- 현재와 미래의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당성
- 식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품질인증로고 포함)
-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도
- 농식품 국제무역에 대한 태도

## 2. 설문조사 결과

### 2.1. 농업·농촌

#### 2.1.1. 농업·농촌의 중요성

전체 응답자 중 92%가 농업·농촌이 유럽 연합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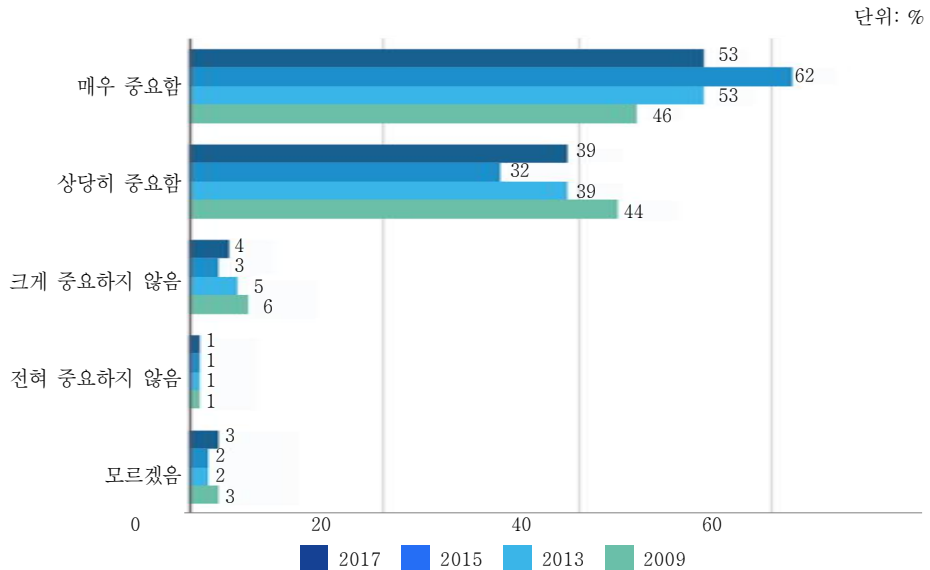
#### 2.1.2. 10년 전과 현재의 농촌상황 비교

전체 응답자 중 64%가 10년 전에 비해 '광대역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9%)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 보건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은 10년 전과 비교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과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이 비슷했다. 반면 '환경 및 경관'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의 경우 개선 평가 비중보다 악화 평가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 및 경관'의 경우 평가 비중에 있어 회원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리투아니아(63%), 폴란드(59%), 아일랜드(56%)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평가 비중이 높았으나, 불가리아(16%), 프랑스(18%), 그리스(20%)는 매우 낮았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역시 회원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몰타(73%), 폴란드(64%), 아일랜드(56%)의 경우 개선되었다는 평가 비중

이 과반 수 이상이었으나, 프랑스(72%), 그리스(65%), 크로아티아(63%)는 악화되었다는 평가 비중이 과반 수 이상이었다.

<그림 1> 유럽연합 시민들이 인지하는 농업·농촌의 중요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 2.1.3.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응답자의 55%가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농업인의 가장 큰 사회적 역할로 꼽았다. 다음은 ‘동물복지’(28%),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25%), ‘다양한 품질의 농산물 제공’(2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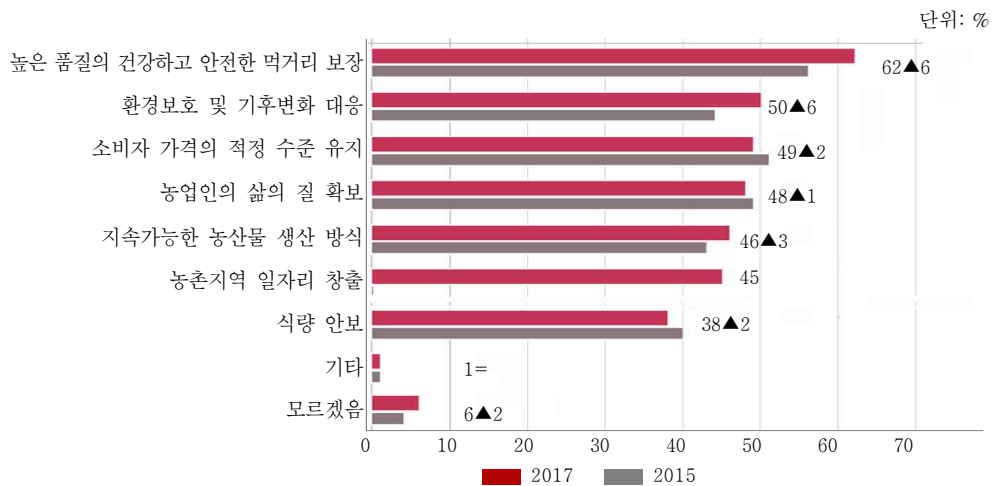
### 2.1.4. 주요 사안별 정책결정의 주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유럽연합이 개별 국가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사안은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51% vs 34%)’, ‘식량안보(48% vs 37%)’,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44% vs 40%)’였다. 반면, ‘소비자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는 정책 결정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비슷(42% vs 42%)했다.

### 2.1.5.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농업·농촌 정책의 목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다. 전체 28개국 중 24개국에서 농정의 주요 목적이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50%), ‘소비자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49%),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48%) 순이었다. 한편,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이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2015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다.

<그림 2> 농업·농촌 정책의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 2.2. 공동농업정책

### 2.2.1. 공동농업정책의 인지도

전체 응답자의 67%가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0%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었고, 나머지 57%는 대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었다. 하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절반 이상이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국가별로는 스웨덴(91%), 핀란드(90%), 리투아니아(89%)에서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탈리아(44%), 스페인(56%), 영국(60%)에서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2.2.2. 공동농업정책의 성과

응답자들은 공동농업정책이 대체로 의도했던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공동농업 정책이 ‘식량안보’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72%였다.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64%였다. 또한 각각 62%와 60%가 공동농업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업’, ‘소비자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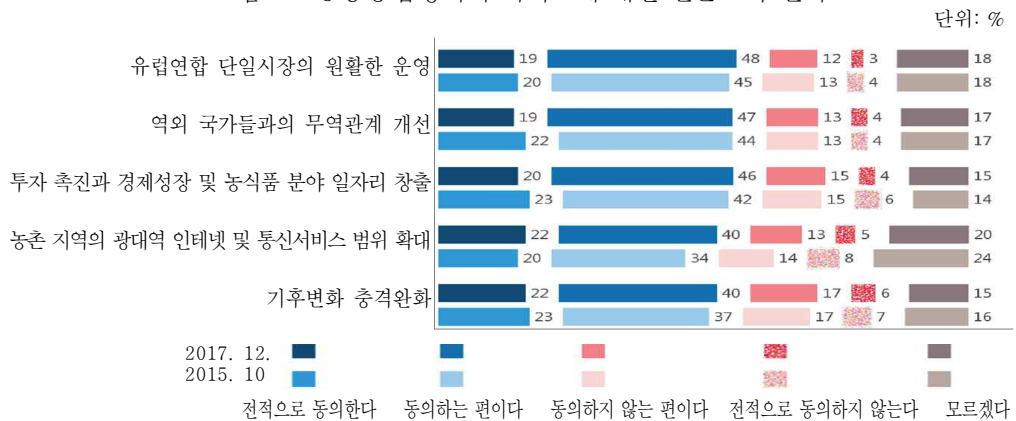
### 2.2.3.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

전체 응답자의 88%가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 중 ‘푸드체인 상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농식품을 지원하는 연구 및 혁신 개발’, ‘청년들의 농업 진입 증가’를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중 역시 모두 84%로 매우 높았다.

### 2.2.4. 공동농업정책의 기여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공동농업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럽연합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67%는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 단일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역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 개선(66%)’, ‘투자 촉진과 경제성장 및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66%)’, ‘농촌 지역의 광대역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범위 확대(62%)’, ‘기후변화 충격 완화(62%)’ 순이었다.

<그림 3> 공동농업정책의 기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 2.2.5. 공동농업정책의 수혜자

전체 응답자의 61%가 공동농업정책이 농업인들뿐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비율은 2013년보다 16%포인트 감소한 것이나 2015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다.

## 2.3. 농업인 재정지원 및 공동농업정책 예산

### 2.3.1. 농업인 재정지원액 적정 수준

현재 농업인에 대한 EU의 재정지원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답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45%였으며, 10년 이내에 더욱 증가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은 26%였다. 국가별로 반응의 편차가 있었는데 14개국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본 비율이 50% 이상이었으나, 라트비아(27%), 프랑스(30%), 에스토니아(34%), 룩셈부르크(34%)에서는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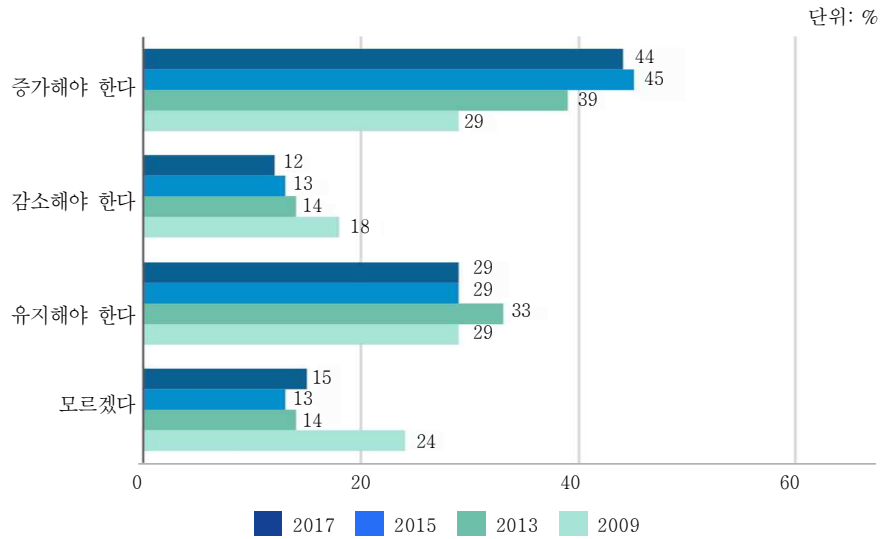
### 2.3.2. 높은 공동농업정책 예산 비중의 정당화 근거

응답자들은 공동농업정책이 전체 EU 예산에서 높은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이유로 '지속가능한 농업'(30%), '식량 안보'(28%), '높은 인적·재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농업의 특성'(28%)을 들었다.

### 2.3.3. 미래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전체 응답자의 44%가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증가를 원한다고 답변해 감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12%)보다 크게 높았다.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를 원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5%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감소를 원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증가를 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나 덴마크(17%), 네덜란드(25%), 독일(2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 미래 농업인 재정 지원액 증감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



주: “앞으로 10년 동안 유럽연합의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증가/감소/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 2.3.4. 상호준수의무에 관한 의견

응답자의 대다수(90%)가 식품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경 기준 혹은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둘 다 88%)가 보조금 삭감에 동의했다.

### 2.3.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보조금 지급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8%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호의적이었다. 한편, 직전 2015년 조사에서도 약 90%의 응답자가 보조금 지급에 호의적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 2.4. 농식품 구매의 결정요인 및 농식품 산업

### 2.4.1. 농식품 구매요인

전체 응답자의 77%가 ‘지역의 전통 및 노하우 준수’가 농식품 구매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라고 응답하였다. ‘품질인증(76%)’과 ‘원산지표시(75%)’ 역시 소비자의 식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2.4.2. 품질인증로고 인지도

품질인증로고 중에서는 공정무역 로고(37%), 유기농식품 로고(27%), 원산지보호 로고(18%), 지리적 표시 로고(18%)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3%는 품질인증로고들 중 적어도 하나는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로고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인증로고의 표시 유무가 식품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3. 유기농식품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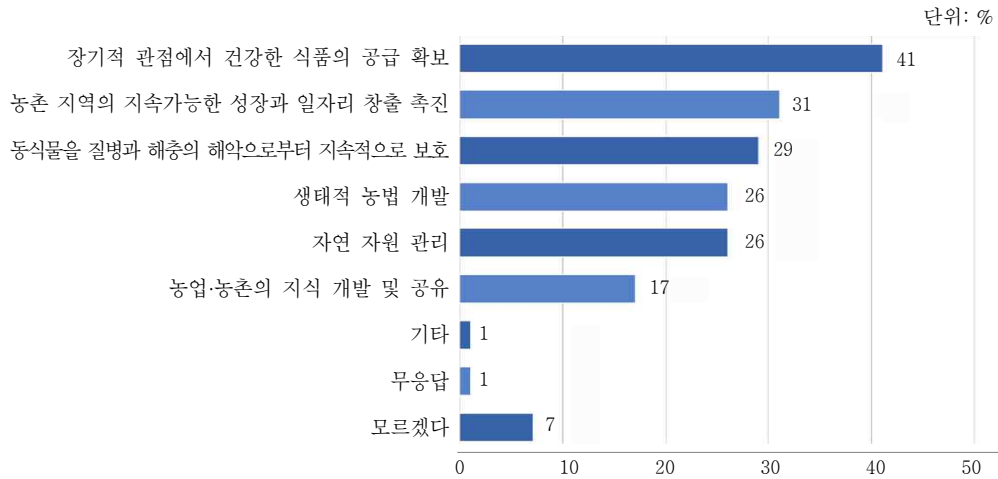
유럽연합 시민들은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해 비싸지만 더 높은 품질 및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90%는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보다 비싸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9%는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해 화학비료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70% 이상의 응답자가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보다 나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한편, 유기농 식품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국가별 편차가 컸다. 13개 회원국에서 대다수의 응답자가 슈퍼마켓과 시장과 같은 거주 지역 주변 유통채널에서 유기농 식품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루마니아(70%), 스페인(68%), 헝가리(65%)의 경우 이용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덴마크(13%), 프랑스(18%), 네덜란드(18%)는 상대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높았다.

#### 2.4.4. 농식품 연구 및 혁신에서의 우선순위

농식품 연구 및 혁신의 우선순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식품의 공급 확보’(41%),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31%), ‘동식물을 질병과 해충의 해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29%)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생태적 농법 개발(26%)’, ‘자연 자원 관리(26%)’, ‘농업·농촌의 지식 개발 및 공유(17%)’ 순이었다.



&lt;그림 5&gt; 농식품 연구 및 혁신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 2.5. 국제 농산물 무역에 대한 태도

### 2.5.1. 농산물 수입 장벽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자의 87%는 유럽연합의 안전 및 품질 조항의 완전한 준수가 있을 때만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2%는 EU는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을 가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39%만이 원산지와 무관하게 농산물 수입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

### 2.5.2. 무역협정에 대한 태도

전체 응답자의 64%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무역협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후생 증가를 인정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9%는 무역 협정이 유럽 연합의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역시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무역 협정으로 인해 농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 3. 요약 및 정리

유럽연합 시민들의 대다수는 농업·농촌이 유럽연합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농촌 상황은 다소 악화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대역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나 ‘사회, 보건 및 문화 서비스’와 ‘사회적 포용’은 의견이 나뉘었으며, ‘환경 및 경관’과 ‘경제 성장 및 일자리’는 악화하였다고 보는 비중이 더 높았다.

이처럼 농촌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공동농업정책이 농업인 뿐 아니라 모든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식량안보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공동농업정책의 우선순위는 ‘푸드체인 상에서 농업인의 역할 강화’, ‘농식품을 지원하는 연구 및 혁신 개발’, ‘청년들의 농업 진입 증가’라고 응답했다.

또한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농업인 재정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40% 이상이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액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았고, 25% 이상은 너무 낮다고 답변했다. 10년 이내에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액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0% 이상이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보조금 지급에 동의해 농업인의 환경 보호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식품 안전기준 혹은 동물복지와 같은 상호준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들에게는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결과는 유럽연합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식품안전성과 품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목적과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로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농식품 연구 및 혁신에서의 최우선순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식품의 공급 확보’라고 보았다. 이것은 유럽연합 시민들이 농업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공동농업정책에서 기대하는 것이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론과 정책에서 농업·농촌에 강조하는 부분이 식량 안보에서 식품의 품질과 동물복지 및 환경기준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사안별 정책실행의 주체로 유럽연합이 개별 국가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사안은 ‘높은 품질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식량안보’, ‘농업인의 삶의 질 확보’였다. 반면, ‘소비자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는 정책 결정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비슷했다. 한편, 정책결정의 주체에 관해서는 국가별 의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품질인증로고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품질인증로고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인증로고의 표시 유무가 식품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의 전통 준수 및 원산지 표시 역시 식품 구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유기농식품이 다른 식품에 비해 비싸지만 더 높은 품질 및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40%이상의 응답자가 유기농 식품의 거주 지역에서의 이용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 관련 응답자의 대다수는 유럽연합의 안전 및 품질 조항의 준수와 같은 무역 장벽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소비자들 뿐 아니라 유럽의 농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8.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European Commission.